

# 기획특집

## 여성 대표성의 현주소와 정책대안

- 세계의 정치부문 여성할당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김원홍 | 본원 연구위원

- 행정분야의 여성대표성과 향후 방향

문미경 | 본원 연구위원, 김혜영 | 본원 전문연구원

- 정부의 민간기업 내 여성임원진 비율의 확대를 위한 세계 각국 움직임

최민영 |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 세계의 정치부문 여성할당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  
●  
●

김 원 홍  
본원 연구위원

##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 공직부분에 여성의 대표성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들어와 UN이 여성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여성대표성의 논리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가 강조되고, 실질적 양성평등의 구현을 위해 여성친화적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여성 공직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이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정책은 개인의 삶의 영역을 구석구석 지배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만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공직부분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지식정보화 사회를 진입한 단계에서 국가의 역할이나 정치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여성의 공직 진출은 더욱 중요하다.

역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8대까지 포함하여 불과 5.1%에 불과하다. 그나마 여성국회의원 수가 증가한 것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물결 속에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가 과거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뀌고, 여성문제가 사회문제의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나타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정치권은 여성유권자의 표를 보다 인식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하나의 공약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말부터 여성단체들은 연대하여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여성후보들에 대한 지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321개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총선여성연대를 발족시키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정치권은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정당법에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2002년 제3차 동시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당선권 범위 내 여성 50%이상을 공천하고, 광역의회 지역구 할당제 30%를 노력사항으로 공천할 것을 정치관계법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은 ‘맑은 여성정치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101명 여성후보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당에 보내고 각 당 대표에게 건의, 지역이나 비례대표에 넣어달라고 압력작업을 하였다. 아울러, 정치권은 2004년 4월 15일 실시한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법 31조의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원 지역구 30%(노력사항), 비례대표제 50% 여성할당을 명시하였다. 그 결과 ‘맑은 넷’ 추천후보가 상당수 진입, 특히 전 현직 의원까지 합하면 거의 80%까지 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있을 제4차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의 도입과 함께 10% 수준의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였고, 50%는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였다. 2007년 6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에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한 방안으로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하에서 홀수 번호 여성배치(지방의회의 경우 안 지킬시 선관위에 접수 불가), 선출직 여성 30% 공천 권고를 위한 여성추천 보조금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 선거지원 허용 등을 포함시켰다. 18대 총선

에서 중앙선관위가 전국 지역구 245개의 5~15%, 15~30%,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완화하였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이 46명(44.6%)의 여성을 공천해 가장 많은 17억7,000만원을 수령했고, 15명(7.6%), 18명(7.3%)의 여성을 공천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5억9,000여만원, 4억7,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외에도 현재 국가에서 정당에 여성정치발전기금(보조금의 10%)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기금은 전체 약 36억5천2백만원(한나라당 15억1천3백만원, 민주당 12억1천9백만원, 자유선진당 3억 3천5백만원, 친박연대 2억 1천 5백만원, 민주노동당 2억 6천2백만원, 창조한국당 8천6백만원, 진보신당 2천 2백만원)이다. 사용은 교육비, 후보 선거지원금, 홍보비, 여성조직 운영비, 여성단체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1년 현재 공직선거법에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의 경우 여성후보 공천 30%가 노력사항으로 되어 있고, 비례대표의 경우 지방의회의 경우 1, 3, 5번 순으로 교호순번제 의무제(지키지 않을시 선관위 접수 불가), 국회의 경우 의무제는 아니나, 여야당의 경우 지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여성후보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제화하였다. 관련 법규는 다음<표 1, 2>와 같다.

〈표 1〉 공직선거법의 여성할당제 규정

조 항	내 용	비 고
제47조 제5항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 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여성공천의무제” • 2010년 1월 25일 신설 • 2010년 3월 12일 개정

조 항	내 용	비 고
제52조 제2항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 (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재 규정-등록무효” • 2010년 3월 12일 신설
제47조 제4항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여성할당제 권고조항” • 2005년 8월 4일 신설
제47조 제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비례대표 할당제 및 번호 규정” • 2005년 8월 4일 개정

〈표 2〉 정치자금법의 여성추천보조금 및 여성발전기금 규정

조 항	내 용	비 고
제52조 제2항	<p>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p>②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p> <p>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원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배분·지급한다.</p> <p>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여성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p>	- “여성추천보조금제도” • 2005년 신설 • 2006년 개정
제28조	①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조 항	내 용	비 고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관계비용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여성정치발전기금” • 2005년 신설
제8조 제3항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여성추천보조금용도제한” • 2005년 신설 • 2010년 개정
제29조 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 또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여성추천보조금 용도 외 사용시 제재조치 : 보조금감액조치” • 2006년 신설 • 2010년 개정

2010년 제18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14.7% (승계 포함 44명)이고, 제5차 지방선거결과 광역의원의 경우 14.8%, 기초의원의 경우 21.6%,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재 2.6%이다. 이처럼 여성 국회의원 수와 지방의회 여성의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가족의 지원, 여성단체의 지원, 유권자의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 등의 영향도 있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법·제도적인 측면의 변화와 여성운동의 성과가 컸다. 2006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17대 남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차분석 및 성인지성 확대방안 연구’<sup>1)</sup>, 2009년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sup>2)</sup>에 의하면, 여성의원들은 남성의원들에 비하여 안전문제, 가족,

교통, 환경, 문화 등 여성친화적 정책과 입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여성의원의 증가에 따른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성 주류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2년 제19대 총선을 맞아 세계의 정치부문 여성할당제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II. 세계의 정치부문 여성할당제 소개

부록에 있는 세계의 정치부문의 여성할당제 표는 quotaproject<sup>3)</sup>팀의 자료를 재구성 한 것으로, 2010년 현재 전 세계 200여개국 중 어떠한 유형이든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101개국이다. 그리고 종전에

1)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은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현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정원 (연세대학교 동서문 제연구원 연구교수), Aie-Rie Lee(미국 Texas Tech. 대학교 교수), Kazuki Iwanaga(스웨덴 Halmstad 대학교 교수)이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2)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경숙(서울시 전의원), 정형욱(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이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한 연구임.

3) <http://www.quotaproject.org>

할당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국가 및 지금 할당제 입법을 추진 중인 7개국을 포함하여 총 108개국이 있다. 위 국가들의 여성의원비율의 평균은 21.3%로, 이를 넘는 총 51개국으로 여성 대표성이 10% 이상 ~21.3% 미만인 국가는 44개국이고, 10% 미만인 국가도 13개국에 이른다. 한국은 14.7%(총 299석 중 44석이 여성)<sup>4)</sup>로 76위를 기록했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할당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헌법이나 관련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선거후보자 명부를 작성시 여성 혹은 저대표되고 있는 성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후보자 수 할당’ 유형이며, 둘째, 헌법이나 관련법으로 의석의 일정 비율을 여성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석 할당’ 유형이다. 셋째, 법규정은 없지만 정당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성’에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정당 할당’ 유형이 있다.

그동안 여성 권익의 선진국으로 불렸던 스웨덴(2위, 45.0%), 노르웨이(7위, 39.6%), 벨기에(8위, 39.3%), 덴마크(12위, 38.0%), 등을 제치고, 여성들이 르완다의 가장 중요한 정부 부처를 도맡고 있다. 여성의원 비율 56.3%로 1위를 기록한 르완다는 정당명부식 비례제(List PR)라는 선거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르완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가하게 된 것은 1994년 르완다 대학살사건이후 인구의 70퍼센트를 여성이 차지하게 된 상태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여성으로 간주한 가운데,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상하원 의석의 30% 여성 할당’을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급격하게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5)</sup>

이러한 르완다 여성의 정치참여 증가와 함께 여성들은 자신의 땅과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며, 여성들이 결혼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남편과 함께 모을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의 재산이 배우자와 아들과 딸에게 동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상속법이 통과되었다. 강간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경찰긴급상담전화서비스가 마련되어 있고, 가해자는 매우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는다. 피임 역시 널리 보급되었다. 여성이 아이를 그만 낳고 싶어 한다면, 남편이 이것을 반대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은 여성들의 권리로 간주된다. 르완다에는 총 8명의 여성 장관들이 있다. Mushikiwabo 장관은 “우리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부분의 내각회의에 참여하시는데, 그는 항상 틀에서 벗어나 사고하고 정책을 입안하라고 독려하십니다. 회의는 매우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 나라를 위한 주요 결정들이 내려집니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하여 르완다의 발전은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sup>6)</sup> 실제, 모잠비크, 우간다, 탄자니아는 여성의원 비율이 30% 넘는다.

결국, 전세계 국가중 여성의원 비율이 평균 21.3%를 상회하는 51개국의 대략적인 할당제 유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법에 의한 ‘후보자 수 할당’ 유형을 채택한 국가가 22개국, 법에 의한 ‘의석 할당’ 유형은 10개국, ‘정당 할당’ 유형이 16개국이다.

4) 2011년 현재 한국여성국회의원 비율은 승계 포함 14.7%를 이르고 있다.

5) Schwartz, Helle, 2005,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Rwandan Parliament – An Analysis of Variations in the Representation of Women's Interests Caused by Gender and Quota, IPU

6) 출처: 주한르완다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표 3〉 여성의원 평균비율(21.3%)을 넘는 51개국의 할당제 유형

할당 유형	국 가
후보자 수 할당	남아프리카, 벨기에, 코스타리카, 앙고라, 아르헨티나, 스페인, 네팔, 마케도니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포르투갈, 멕시코, 동티모르, 볼리비아, 이라크, 나미비아, 키르기스스탄, 세네갈, 모리타니,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의석 할당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탄자니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레소토, 파키스탄, 필리핀, 에리트레아
정당 할당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모잠비크, 독일, 스위스, 튀니지, 오스트리아, 에티오피아, 오스트레일리아, 크로아티아, 캐나다, 영국, 체코, 이탈리아
기 타	덴마크, 트리니다드 토바고, 중국

주 : 밑줄이 그어진 국가는 정당할당제를 병행하고 있는 국가임.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순으로 국가를 나열함.

먼저 법에 의한 ‘후보자 수 할당’을 채택한 국가는 남아프리카(6위), 코스타리카(9위), 앙고라(9위), 아르헨티나, 벨기에, 스페인, 네팔, 마케도니아, 가이아나, 페루, 포르투갈, 멕시코, 동티모르, 볼리비아, 이라크, 나미비아, 키르기스스탄, 세네갈, 모리타니, 세르비아 등이며, 최저 25%(동티모르, 28위, 26.1%)에서 최고 60%(스페인, 12위, 36.3%)까지 후보자 수 할당을 헌법 또는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2개국이 정당할당제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할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정당이 제출한 명부를 선거관련기관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보조금 삭감 등의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한다든가 등을 통해 할당제 준수의 의무화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13개국<sup>7)</sup>에 이른다.

다음으로 법에 의한 ‘의석 할당’을 채택한 국가는 르완다(1위)를 비롯해, 부룬디(18위), 우간다(19위), 탄자니아(20위), 아프가니스탄(27위), 레소토(37위), 수단(32위), 파키스탄(41위), 필리핀(42위), 에리트레

아(45위) 등 총 10개국이다. 르완다의 경우, 상하원 의석 30% 할당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 대부분도 30% 전후로 의석을 할당하고 있다. 이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체제는 다양하다. 정당명부식 비례제(르완다, 부룬디), 단순다수대표제(FPTP: 탄자니아, 우간다, 수단), 단기비이양식 투표제(SNTV: 아프가니스탄), 혼합비례제(MMP: 레소토), 혼합병렬 투표제(Parallel: 파키스탄, 필리핀)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필리핀을 제외하고 정당할당제를 병행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 할당’ 유형은 스웨덴(2위), 아이슬란드(4위), 노르웨이(5위), 네덜란드(6위), 모잠비크(8위), 독일(15위), 스위스(22위), 튀니지(24위), 오스트리아(25위), 에티오피아(26위), 오스트레일리아(35위), 크로아티아(38위), 캐나다(42위), 영국(45위), 체코(45위), 이탈리아(50위) 등 16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10위권 내의 5개국(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모잠비크)를 살펴보면, 선거

7) 여성의원비율이 높은 순부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38.5%, 후보자 수 30% 할당제 실시, 의무조항 있음, 정당할당제 병행, List PR), 코스타리카, 벨기에, 스페인, 네팔, 마케도니아, 페루, 에콰도르, 포르투갈, 멕시코, 동티모르, 모리타니, 세르비아(21.6%, 후보자 수 30% 할당제 실시, 의무조항 있음, 정당할당제 없음, List PR)

명부 작성시 남녀동수제(스웨덴) 혹은 40~50%를 각 성에게 할당(아이슬란드, 노르웨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국가들의 경우도, 최소 25%를 여성에게 할당(튀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당헌 및 당규에 30% 여성 할당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 중 몇몇 개국은 여성할당 규정이 정치적 대표성의 성평등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만큼, 후보자수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당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남녀 교호순번제를 도입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45.0%의 여성의원 비율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 역시 남녀동수할당제뿐만 아니라 남녀교호순번제를 같이 실시하고 있다. ‘정당 할당’ 유형은 그 특성상 정당들의 자발

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별 성평등성 추구 노력 혹은 전반적인 사회적 압력의 작용으로 인해 그 실천 강도나 양상이 상이해질 수 있다.

이렇게 21.3% 이상의 여성의원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51개국 중 3개국<sup>8)</sup>을 제외한 48개국은 정치 대표성의 성평등화를 목적으로 대부분 최소 30%의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의무조항을 두거나 남녀교호순번제 등의 보완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국가 중 하원 혹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들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

순위	국가	여성의원 비율	할당제	순위	국가	여성의원 비율	할당제
1	르완다	56.3	30% 의석 할당	12	덴마크	38.0	(할당규정 없음)
2	스웨덴	45.0	정당할당	13	스페인	36.6	40~60% 후보자 수 할당 정당할당
3	남아프리카	44.5	정당할당	14	네팔	33.2	33% 후보자 수 할당
4	아이슬란드	42.9	정당할당	15	독일	32.8	정당할당
5	노르웨이	39.6	정당할당	16	마케도니아	32.5	33% 후보자 수 할당 정당할당
6	네덜란드	39.3	정당할당	17	에콰도르	32.3	30% 후보자 수 할당
6	벨기에	39.3	50% 후보자 수 할당 정당할당	18	부룬디	32.1	30% 후보자 수 할당
8	모잠비크	39.2	정당할당	19	우간다	31.0	의석 할당(지역구마다 1명의 여성 할당)
9	코스타리카	38.6	40% 후보자 수 할당 정당할당	20	탄자니아	30.4	20~30% 의석 할당
9	앙고라	38.6	30% 후보자 수 할당	21	가이아나	30.0	(후보자 수 할당 유형이나 구체적 내용 없음)
11	아르헨티나	38.5	30% 후보자 수 할당 정당할당				

8) 덴마크(8위, 37.4%) 와 트리니다드 토바고(26위, 26.8%), 이 2개국은 예전에 할당제가 있었거나, 현재 할당제 입법을 추진중인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전에 쿼터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진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제 한국을 비롯하여 평균 미만에 속하는 국가군 중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와 미만인 국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성평등성 확보를 위한 함의를 추출하기에 부적합 사례로 보여 고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4개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할당 유형으로

‘후보자 수 할당’을 채택한 국가가 13개국, ‘의석 할당’을 채택한 국가 6개국, ‘정당 할당’을 채택한 국가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이전에 할당제가 있었거나 현재 할당제를 입법중인 국가들이거나 할당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진 국가들이다.

〈표 5〉 국회여성의원 비율(10%) 대에 속하는 국가(44개국)의 할당제 유형

할당 유형	국 가
후보자 수 할당	도미니카 공화국, 폴란드, 프랑스,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그리스, 보스니아, 알바니아, 부르키나파소, 우루과이, 한국, 슬로베니아, 파라과이
의석 할당	방글라데시, 수단, 지부티, 시에라리온, 니제르, 인도, 요르단
정당 할당	말라위, 니카라과,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엘살바도르, 몰도바,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짐바브웨, 체코, 니카라과, 짐바브웨, 칠레, 카메룬, 타이, 키프로스, 과테말라, 루마니아, 모로코, 말리 적도기니
기 타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북한, 콜롬비아, 라이베리아, 아이티

주 : 밑줄이 그어진 국가는 정당할당제를 병행하고 있는 국가임.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순으로 국가를 나열함.

먼저 ‘후보자수 할당’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30%의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소 20%(파라과이, 80위)에서 최대 50%(프랑스, 55위)까지 그 사이에서 여성할당제 비율을 헌법이나 선거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9여개국에 재정적 패널리티 혹은 보상이라는 방법이나 선거관련기관의 수리 거부 등을 통해 여성할당 비율 준수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10개국이 ‘정당 할당’ 유형을 병행하고 있다.

‘의석 할당’ 국가들은 국회의 경우 의석의 10% 전후를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규정을 헌법이나 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으며, 몇몇 국가들의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30%~50% 정도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기도 하다. 이 중 니제르, 인도 2개국은 ‘정당 할당’ 유형을 병행하고 있다.

‘정당 할당’만을 채택한 국가들은 말라위(52위,

20.8%)를 비롯 19개국이다.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여성할당 비율을 각각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비율을 충족시키고자 그 보완기제로, 남녀교호순번제 또는 지퍼 시스템(Zipper System), 유리한 순위부여 등을 채택하고 있다.

### III.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상으로 한국 정치부문에서 할당제의 도입과정과 외국의 할당제 소개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가 과거에 비해 신장은 하였으나, 최근 들어 르완다, 모잠비크, 우간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지역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중남미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아시아의 경우 네팔 정도가

30%를 넘고 있다. 2011년 3월 현재 IPU 자료에 의하면 권역별로 보면 여성의원 비율(하위)은 북구가 41.6%로 가장 높고, 아시아권의 경우가 18.3%로 아랍국가군(11.4%), 태평양국가군(12.4%)으로 낮은 순위에 속한다. 이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여성의 정치참여를 통하여 정치개혁 주도 및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발전을 이루어보자고 하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는 여성정치참여의 선진국으로 북구의 사례를 예로 많이 들었으나, 이제는 여성정치 할당 신생국인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눈을 돌려볼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현재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100점 만점에 61.2점. 의사결정 부문은 23.7점(2008년 24.6점)로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2008년 UNDP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GEM(여성권한척도)은 109개국 중 61위를 차지하여, WEF, UNDP 등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성평등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인간개발’ 관련 지표는 상위권이나, 정치·경제 등 의사결정 관련 지표에서는 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18대 여성국회의원 비율(14.7%)은 IPU(국제의원연맹) 회원국의 평균 19.1%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바로 정당 나름의 당헌당규에 의해 일정비율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형태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국가가 법으로 국회 및 지방의회 선거에 민족성과 여성을 고려한 의석수를 지정 할당하는 방식으로, 다시 그 법에 근거하여 정당이 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식(아르헨티나, 프랑스 등), 셋째, 법으로 여성의석을 지정 할당하는 방식(르완다, 모로코) 등

이 있다. 그런데, 여성할당제에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교호순번제 강제무제이거나 선관위에서 접수를 하지 않거나, 할당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식의 벌칙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은 법에 의한 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방식에 의한 할당제의 중요성보다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2012년에 한국에는 중요한 2개의 선거가 있다. 하나는 19대 총선으로 2012년 4월 11일 실시된다. 그리고 18대 대선이 있다. 선거일은 2012년 12월 19일이다.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4.7%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국제비교를 하여 보았을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를 위한 극복방안으로는 공직선거법에 그간 정치학자들이 주장하여왔듯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면서 50% 여성후보할당제를 도입하면서, 지방의회 처럼 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서 접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석패율 제도 이야기도 나오기에 더욱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여성 공천할당 50%의 강제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구 경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 여성후보할당 30%의 노력으로 되어있는 것을 강제의무제로 바꾸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선관위에서 접수를 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당의 주요당직에 있어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공천심사위원회에 50%이상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정치인 경력 지속성 문제, 지속적인 여성정치인 육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되도록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정치인은 물론 여성가족부, 시민단체, 학계, 매스컴 등과 연대하여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성이 정치에서 대표성을 보장받는 문제는 정치적인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맞아 여성들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가치

에 대한 권위적 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분야에의 여성참여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란 점(기술적 대표성), 둘째, 여성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 성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남성 중심의 정치에 또 다른 정치스타일, 정치문화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점(실질적 대표성), 셋째, 유엔은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분야에 30%이상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는데 한국은 유엔 및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부록〉 국가별 할당제유형과 여성의원비율 및 법률제정 현황

국가	할당 유형	선거 체제	의회 유형	정당 할당 규정	구체적 내용			정당할당 내용	한법규정			선거법규정			하원/국회		
					하원/국회	상원	지방의회		하	상	지***	하	상	지	선거 년도	선거 결과	여성의원 비율(%)
르완다	의석할당	List PR	양원제		의석 할당 (30%)	의석 할당 (30%)	의석 할당(30%) (여성전용선거구제 및 여성의회 병행)		○		○	○			2008	45/80	56.3
스웨덴	정당할당	List PR	단원제					남녀동수 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2010	157/349	45.0
남아프리카	후보자수 할당	List PR	양원제	○			후보자 수 할당 (50%)	선거명부에 최소 50% 여성 할당							2009	178/400	44.5
아이슬란드	정당할당	List PR	단원제					선거명부 작성의 주요 규칙은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임. 각 성이 40% 이상 대표될 수 없음			○				2009	27/63	42.9
노르웨이	정당할당	List PR	단원제					선거명부의 40~50% 양성 할당							2009	67/169	39.6
벨기에	후보자수 할당	List PR	양원제	○	후보자 수 할당 (50%)	후보자 수 할당(50%)	후보자 수 할당 (50%)	한쪽 성이 정당명부의 3/2를 넘지 못함			○	○			2010	59/150	39.3
네덜란드	정당할당	List PR	양원제					여성 할당제 및 남녀교호순번제							2010	59/150	39.3
모잠비크	정당할당	List PR	단원제					선거명부의 30% 여성 할당							2009	98/250	39.2
코스타리카	후보자수 할당	List PR	단원제	○	후보자 수 할당 (40%)		후보자 수 할당 (40%)	선거명부 남녀 교호 순번제 양성예 최소 40~50% 할당 (적용 의회는 정당마다 상이) 집권시 의석의 최소 40%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 정당도 있음.			○	○			2010	22/57	38.6
앙고라	후보자수 할당	List PR	단원제		국회 30% 후보 쿼터제							○			2008	85/220	38.6
아르헨티나	후보자수 할당	List PR	양원제	○	후보자 수 할당 (30%)	후보자 수 할당(30%)	후보자 수 할당 각 지방에 따라 할당률 상이	선거명부를 비롯한 정당 내의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존중되어야 함. 정당별로 선거명부 작성시 30~50% 여성 할당 (지방의회에 만 적용하는 정당도 있음)	○		○	○			2009	99/257	38.5
덴마크	이전에 쿼터제가 있었거나 현재 쿼터제를 입법중	List PR	단원제												2007	68/179	38.0
스페인	후보자수 할당	List PR	양원제	○	후보자 수 할당 (40~60%)	후보자 수 할당(40~60%)	후보자 수 할당 (40~60%)	선거명부에 40% 양성 할당			○	○			2008	128/350	36.6

국가	합당 유형	선거 체제	의회 유형	정당 합당 규정	구체적 내용			정당합당 내용	한법규정			선거법규정			하원/국회		
					하원/국회	상원	지방의회		하	상	지	하	상	지	선거 년도	선거 결과	여성의원 비율(%)
네팔	후보자수 합당	FPTP	단원제		후보자 수 합당 (33%)		후보자 수 합당 (40%)		○		○	○			2008	197/594	33.2
독일	정당합당	MMP	양원제					당직 회의 및 선거명부에 여성을 각각 33~50% 합당 명부에 처음 두명을 여성에게 할 당 및 남녀 순번교호제 실시							2009	204/622	32.8
마케도 니아	후보자수 합당	List PR	단원제	○	후보자 수 합당 (33%)		후보자 수 합당 (33%)	구체적 규정을 찾을 수 없음			○	○			2008	39/120	32.5
에콰도르	후보자수 합당	List PR	단원제	○	후보자 수 합당 (30%)		후보자 수 합당 (30%)	선거명부의 25% 여성 합당			○	○			2009	40/124	32.3
부룬디	의석합당	List PR	양원제		의석 합당(30%)	의석 합당 (30%)			○			○			2010	34/106	32.1
우간다	의석합당	FPTP	단원제		의석 합당 (지역구마다 1 명의 여성 합당)	의석 합당 (1/3 석)			○		○	○			2006	102/324	31.0
탄자니아	의석합당	FPTP	단원제		의석 합당 (20석~30석)		의석 합당(25%)		○		○	○				97/319	30.4
가이아나	후보자수 합당	List PR	단원제		후보자 수 합당				○						2006	21/70	30.0
스위스	정당합당 이전에	List PR	양원제					정당명부의 40% 여성 합당							2007	58/200	29.0
트리니 다드 토바고	쿼터제가 있었거나 현재 쿼 터제를 입법중	FPTP	양원제												2010	12/42	28.6
튀니지	정당합당	Parallel	양원제					여당(RCD)은 총 152석 중 38석 (25%)를 여성 후보자에게 배정 2005년에 대통령은 지방의회에 25%까지 여성 합당을 규정함이 규정은 여당에게만 적용)							2009	59/214	28.0
오스트 리아	정당합당	List PR	양원제					선거명부의 33.3~ 50% 여성 합당							2008	51/183	27.9
에티오피아	정당합당	FPTP						구체적 규정을 찾을 수 없음							2010	152/547	27.8
아프가니 스탄	의석합당	SNTV	양원제		의석 합당 (각 지역당 2석 이상)	의석 합당 (17%)	의석 합당(25%)		○			○			2010	69/249	27.7
페루	후보자수 합당	List PR	단원제		후보자 수 합당 (30%)		후보자 수 합당 (30%)				○	○			2006	33/120	27.5
포르투갈	후보자수 합당	List PR	단원제	○	후보자 수 합당 (33%)		후보자 수 합당 (33%)	선거명부의 1/3 여성 합당				○	○		2009	63/230	27.4
멕시코	후보자수 합당	MMP	양원제	○	후보자 수 합당	후보자 수 합당	후보자 수 합당	정당명부에 50% 여성합당				○			2009	131/500	26.2
동티모르	후보자수 합당	Parallel	단원제		후보자 수 합당 (25%)							○				23/88	26.1
수단	의석합당	FPTP	양원제		의석 합당 (60석)							○			2010	114/446	25.6
볼리비아	후보자수 합당	MMP	양원제	○	후보자 수 합당 (30%)	후보자 수 합 당(25%)	후보자 수 합당 (30%)	선거명부를 비롯한 정당구조 내에 서 50% 여성 합당			○	○			2009	33/130	25.4
이라크	후보자수 합당	List PR	단원제		후보자 수 합당 (33%)				○			○			2010	82/325	25.2
오스트레 일리아	정당합당	AV	양원제					양성에 40% 합당							2010	37/150	24.7
나미비아	후보자수 합당	List PR	양원제	○			후보자 수 합당(의 원정수에 따라 여 성 후보 합당)	구체적 규정을 찾을 수 없음			○				2009	19/78	24.4
레소토	의석합당	MMP	양원제				의석 합당(30%) 의석 합당 및 여성 전용선거구제 임의 합당)				○				2007	29/120	24.2

국가	할당 유형	선거 체제	의회 유형	정당 할당 규정	구체적 내용			정당할당 내용	한법규정			선거법규정			하원/국회		
					하원/국회	상원	지방의회		하	상	지	하	상	지	선거 년도	선거 결과	여성의원 비율(%)
크로아티아	정당할당	List PR	단원제					선거명부의 40% 양성 할당							2007	36/153	23.5
키르기스탄	후보자수 할당	TRS	단원제	○	후보자 할당 (30%)			구체적 규정을 찾을 수 없음				○			2010	28/120	23.3
세네갈	후보자수 할당(하원) + 의석할당(상원)	Parallel	양원제		후보자 수 할당 (40%)	의석 할당 (40%)	후보자 수 할당		○						2007	34/150	22.7
파키스탄	의석할당	Parallel	양원제		의석 할당 (60석)	의석 할당(4석)	의석 할당 (33%)			○	○				2008	76/342	22.2
캐나다	정당할당	FPTP	양원제					연방선거에서 50% 여성 할당을 목표로 함 25% 여성을 선출시킬 것을 목표로 함							2008	68/308	22.1
필리핀	의석할당	Parallel	양원제	○			의석 할당(1/3석)	선거명부의 25% 여성 할당			○	○			2010	62/280	22.1
모리타니	후보자수 할당	TRS	양원제		후보자 수 할당 (33%~50%)	후보자 수 할당 (수도권 첫번째 순위 여성 배정)	후보자 수 할당 (20~40%)			○	○				2006	21/95	22.1
에리트레아	의석할당	N	단원제		의석 할당(30%)		의석 할당(30%)				○				1994	33/150	22.0
영국	정당할당	FPTP	양원제					40~50% 여성 후보 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노동당의 경우 당선후세 지역에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하고 비율은 30%로 규정함(2005)							2010	143/650	22.0
우즈베키스탄	후보자수 할당	TRS	양원제	○	후보자 수 할당(30%)		후보자 수 할당 (30%)				○				2009	33/150	22.0
체코	정당할당	List PR	양원제					정당이 선출한 자 중 25% 여성할당							2010	44/200	22.0
세르비아	후보자수 할당	List PR	단원제		후보자 수 할당(30%)		후보자 수 할당 (30%)		○		○	○			2008	54/250	21.6
이탈리아	정당할당	List PR	양원제					선거명부의 50% 여성 할당							2008	134/630	21.3
중국	쿼터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짐	N	단원제												2008	637/2987	21.3
도미니카 공화국	후보자수 할당	List PR	양원제	○	후보자 수 할당(33%)		후보자 수 할당 (50%)	선거명부의 33% 여성 할당			○	○			2010	38/183	20.8
말라위	정당할당	FPTP						구체적 규정을 찾을 수 없음							2009	40/192	20.8
니카라과	정당할당	List PR	단원제					선거명부의 30~40% 여성 할당 선거명부의 40% 양성 할당							2006	19/92	20.7
룩셈부르크	정당할당	List PR	단원제					정당명부의 33% 여성 할당 목표 정당 조직 및 선거 명부의 50% 할당							2009	12/60	20.0
폴란드	후보자수 할당	List PR	양원제	○	후보자 수 할당(35%)		후보자 수 할당 (35%)	구체적 규정을 찾을 수 없음							2007	92/460	20.0
이스라엘	정당할당	List PR	단원제					1997년 25% 할당제 도입 이래, 2015년까지 40% 까지 증대시키 고자 노력 중 예비선거 이후 최소 한명의 여성 이 10순위 내에 포함되어야 함 정당명부의 40% 여성 할당							2009	23/120	19.2
리투아니아	정당할당	Parallel	단원제					각 성에게 최소 1/3 할당							2008	27/141	19.1
엘살바도르	정당할당	List PR	단원제	○				선거명부의 35% 여성할당							2009	16/84	19.0
프랑스	후보자수 할당	TRS	양원제		후보자 수 할당(49%)	후보자 수 할당(50%)	후보자 수 할당 (50%)	선거 명부의 50% 할당	○		○	○			2007	109/577	18.9
몰도바	정당할당	List PR	단원제					구체적 규정을 찾을 수 없음							2010	19/101	18.8

국가	할당 유형	선거 체제	의회 유형	정당 할당 규정	구체적 내용			정당할당 내용	한법규정			선거법규정			하원/국회		
					하원/국회	상원	지방의회		하	상	지***	하	상	지	선거 년도	선거 결과	여성의원 비율(%)
방글라 데시	의석할당	FPTP	단원제		의석 할당(13%)		의석 할당		○	○					2008	64/345	18.6
온두라스	후보자수 할당	List PR	단원제	○	후보자 수 할당 (30%)		후보자 수 할당 (30%)				○	○			2009	23/128	18.0
인도네 시아	후보자수 할당	List PR	단원제		후보자 수 할당 (33%)							○			2009	101/560	18.0
카자흐 스탄	이전에 쿼터제가 있었거나 현재 쿼터제를 입법중	Pararell	양원제												2007	19/107	17.8
그리스	후보자수 할당	List PR	단원제	○			후보자 수 할당 (50%)	정당명부의 최소 40% 여성 할당		○					2009	52/300	17.3
베네수 엘라	이전에 쿼터제가 있었거나 현재 쿼터제를 입법중	MMP	단원제												2010	28/165	17.0
보스니아	후보자수 할당	List PR	양원제	○	후보자 수 할당 (1/3)		후보자 수 할당 (1/3)	구체적 규정을 찾을 수 없음			○	○			2010	7/42	16.7
알바니아	후보자수 할당	MMP	단원제		국회 30% 후보 쿼터제							○			2009	23/140	16.4
슬로바 키아	정당할당	List PR	단원제					남녀동수제							2010	24/150	16.0
북한	쿼터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짐	TRS	단원제												2009	107/687	15.6
부르키나 파소	후보자수 할당	List PR	단원제	○	후보자 수 할당 (30%)		후보자 수 할당 (30%)	구체적 규정을 찾을 수 없음			○	○			2007	17/111	15.3
우루과이	후보자수 할당	FPTP	양원제	○	후보자 수 할당 (33%)	후보자 수 할당(33%)	후보자 수 할당 (33%)	1980년대 여성할당제 도입 승인			○	○			2009	15/99	15.2
아일랜드	정당할당	STV						구체적 규정을 찾을 수 없음							2011	25/166	15.1
짐바브웨	정당할당	FPTP	양원제					선거명부의 30% 여성 할당							2008	32/214	15.0
한국	후보자수 할당	Parallel	단원제	○	후보자 수 할당		후보자 수 할당	여성 우대 권고 조항			○	○			2008	44/299	14.7
솔로베 니아	후보자수 할당	List PR	양원제	○	후보자 수 할당 (35%)		후보자 수 할당 (2014년까지 40%)	정당명부의 최소 40% 여성 할당 지방선거에 33% 양성 할당			○	○			2008	13/90	14.4
칠레	정당할당	List PR	양원제					선거명부의 60% 양성 할당 선거명부의 20% 여성 할당 의회 의석의 70% 이상을 동일한 성이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함							2009	17/120	14.2
카메룬	정당할당	PBV	단원제					선거 명부의 25~30% 여성 할당							2007	25/180	13.9
지부티	의석할당	PBV	단원제		의석 할당(10%)							○			2008	9/65	13.8
타이	정당할당	Parallel	양원제					선거 후보의 30% 여성 할당 목표							2007	63/473	13.3
시에라 리온	의석할당	List PR	단원제				의석 할당(50%)				○				2007	16/121	13.2
콜롬비아	이전에 쿼터제가 있었거나 현재 쿼터제를 입법중	List PR	양원제												2010	21/166	12.7
키프로스	정당할당	List PR	단원제					선거명부의 30% 여성 할당							2006	7/56	12.5
파라과이	후보자수 할당	List PR	양원제	○	후보자 수 할당 (20%)	후보자 수 할 당(20%)	후보자 수 할당 (20%)	선거명부의 30~33% 여성 할당			○	○			2008	10/80	12.5



국가	할당 유형	선거 체제	의회 유형	정당 할당 규정	구체적 내용			정당할당 내용	한법규정			선거법규정			하원/국회		
					하원/국회	상원	지방의회		하	상	지***	하	상	지	선거 년도	선거 결과	여성의원 비율(%)
라이베리아	쿼터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짐	FPTP	양원제												2005	8/64	12.5
니제르	의석할당	List PR	단원제	○ 의석 할당(10%)				선거 명부에 10% 여성 할당 선거명부의 40% 여성 할당				○			2009	13/113	12.0
과테말라	정당할당	List PR	단원제					선거명부의 최소 30% 양성에게 할당							2007	19/158	12.0
루마니아	정당할당	List PR	양원제					선거명부의 30% 양성 할당							2008	38/334	11.4
아이티	이전에 쿼터제가 있었거나 현재 쿼터제를 입법중	TRS	양원제												2010	2/18	11.1
인도	의석할당	FPTP	양원제	○			의석 할당(33%)	구체적 규정을 찾을 수 없음			○				2009	59/545	10.8
요르단	의석할당	SNTV	양원제		의석 할당 (12석)							○			2010	13/120	10.8
모로코	정당할당	List PR	양원제					정당명부의 20% 양성 할당							2007	34/325	10.5
말리	정당할당	TRS	단원제					선거명부의 30% 양성 할당							2007	15/147	10.2
적도기니	정당할당	List PR						구체적 규정을 찾을 수 없음	○						2008	10/100	10.0
케냐	의석할당	FPTP	단원제	○ 의석 할당(6석)				의석의 1/3을 여성에게 할당				○			2007	22/224	9.8
아르메니아	후보자수 할당	Parallel	단원제	○ 후보자 수 할당 (15%)				구체적 규정을 찾을 수 없음							2007	12/131	9.2
헝가리	정당할당	MMP	단원제					선거명부의 20% 여성 할당 국회 및 유럽의회 명부에 최대 2명까지 동일한 성이 연속 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음. 기본적으로는 각 성이 번갈아 할당되어야 함.							2010	35/386	9.1
코트디부아르	정당할당	FPTP	단원제					선거명부 포함 정당의 모든 차원에서 30% 여성 할당							2000	18/203	8.9
몰타	정당할당	STV	단원제					정당명부의 20% 여성 할당							2008	6/69	8.7
브라질	후보자수 할당	List PR	양원제		후보자 수 할당 (30%)	후보자 수 할당 (30%)	후보자 수 할당 (30%)	선거명부 및 당직에 30% 여성 할당			○	○			2010	44/513	8.6
파나마	후보자수 할당	List PR	단원제		후보자 수 할당 (30%)							○			2009	6/71	8.5
가나	이전에 쿼터제가 있었거나 현재 쿼터제를 입법중	FPTP	단원제												2008	19/230	8.3
보츠와나	정당할당	FPTP	단원제					선거명부의 30% 여성 할당							2009	5/63	7.9
알제리아	정당할당	List PR	양원제					지역구별로 처음 5순위 내 2명의 순번을 여성에게 할당 지역 차원에서 후보자의 1/5을 여성에게 할당 작은 규모의 선거구에서는 3명의 후보 중 한명을 여성에게 할당							2007	30/389	7.7
소말리아	의석할당	N	단원제		의석 할당(12%)				○						2004	37/546	6.8
레바논	이전에 쿼터제가 있었거나 현재 쿼터제를 입법중	BV	단원제												2009	4/128	3.1
아집트	의석할당	TRS	양원제		의석 할당 (64석)							○			2005	8/454	2.0

\* 이전에 쿼터제가 있었거나 현재 쿼터제를 입법중

\*\* 쿼터제가 있었으나 없어짐

\*\*\* 헌법 및 기타 규정들(선거법 제외)에 규정된 것에 대해 표시함.

- 하원/국회 선거결과 및 여성의원비율은 IPU의 자료(2011년 3월 31일 현황)를 사용하였음.

그러나 우간다, 튀니지, 니제르, 아집트는 IPU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Quotaproject 자료를 이용함.

# 행정분야의 여성대표성과 향후 방향

—공무원,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중심으로—

문 미 경  
본원 연구위원

김 혜 영  
본원 전문연구원

## I. 서론

우리를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이 변화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 중 가장 크게 주목되는 점은 경제가 발전하고 노동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에서 여성을 또 하나의 경쟁요소로 간주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이영, 2002. 강성애 외, 2008).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여성참여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인적자본으로 인식되고 있고, 공공 부문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하며 부패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다(David 외, 1999. 진종순, 2009).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청렴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성인적자원 활용은 어느 정도인가? 특히, 국가정책결정과과정에서의 여성참여는 어느 정도인가? 본고에서는 행정분야와 정부위원회에서의 여성참여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행정분야에서의 여성대표성 현황

### 1. 세계 속에서의 한국여성지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 지수,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GEM), 성불평등지수(GII) 등은 서로 다른 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이다. 이 중 여성권한척도(GEM)는 정부내 관리직에서의 여성대표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2009년 현재 10%미만임을 알 수 있다.

〈표 1〉 여성권한척도 변화 추이

년 도	순위/대상	점 수	여성의원비율(%)	여성행정관리직(%)	여성전문기술직(%)	남녀소득비
2005	59/80	0.479	13.0	6	39	0.48
2006	53/750	0.502	13.4	7	38	0.46
2007	64/930	0.510	13.4	8	39	0.40
2008	68/108	0.540	13.7	8	40	0.52
2009	61/109	0.554	14.0	9	40	0.52

\* 자료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2009)

\* 남녀소득비 : 남성소득 기준 '1' 에 대한 여성소득의 비

## 2. 공직내 여성대표성

합해 2004년 35.4%에서 2009년 4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가.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

우리나라 여성공무원 비율은 중앙과 지방공무원을

〈표 2〉 여성공무원 비율(전체)

(명,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인원	915,689	915,221	940,397	963,132	968,836	955,303
여성	324,576	348,710	365,178	385,759	395,464	392,857
여성비율	35.4	38.1	38.8	40.1	40.8	41.1

\* 행정부(국가, 지방), 입법, 사법, 헌법기관을 포함한 전체공무원임.

### 나.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보다는 다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25.2%에서 2009년 30%로 증가하고 있으나,

〈표 3〉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비율

(명,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인원	256,424	266,176	272,584	275,484	275,231	278,303
여성	64,683	70,568	75,608	78,855	80,666	82,178
여성비율	25.2	26.5	27.7	28.6	29.3	29.5

\* 자료출처 : 2010.12. 지방공무원 균형인사편람.

### 다. 신규채용에서의 여성공무원 비율

최근의 신규 채용 공무원을 직급별로 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행정고시 행정직의 최종합격자가 242명이고, 기술고시 65명, 외무고시 35명, 7급 행정직 1,049명, 기술직 127명, 9급 3,058명, 기술직 165명이다. 국가직 공채합격자의 여성비율은 2008년 41.6%로 나타났는데,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험은 외무고시로 65.7%를 여성이 차지하였다.

행정고시에서도 행정·공안직 공채합격자의 여성비율은 51.2%로 절반을 넘고 있다. 수적으로 가장 많은 9급 공채에서는 여성합격자 비율이 44.6%로 1,439명이 합격하였고, 7급 공채에서는 31.5%로 371명의 여성이 합격하였다. 9급 공채에서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40%를 넘는 여성합격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외, 2009).

〈표 4〉 국가직 공무원 채용 여성합격자

(명,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여성비율(인원)		42.1%(1,076)	39.8%(1,291)	39.5%(1,657)	42.2%(1,607)	41.6%(1,971)
행정고시	행정·공안직	38.4%(76)	44.0%(95)	44.6%(104)	49.0%(123)	51.2%(124)
	기술직	20.3%(13)	19.7%(14)	25.4%(18)	16.4%(9)	21.5%(14)
외무고시		35.0%(7)	52.6%(10)	36.0%(9)	65.7%(21)	65.7%(23)
7급 공채		27.0%(129)	26.8%(183)	24.7%(273)	32.3%(235)	31.5%(371)
9급 공채		47.3%(851)	43.9%(989)	45.5%(1,253)	44.5%(1,219)	44.6%(1,439)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2009, 행정안전백서.

### 3. 각종위원회 여성대표성

정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노력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중에 2002년까지 30%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1998년에 시행했던 참여현황 조사결과 전체 위촉직 위원은 10.4%이고, 세부 기관별로 볼 때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관 중 5개 기관만이 20%를 넘는 상태에서 추진되었다(여성특별위원회, 1998). 각 부처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 달성 계획(여성특별위원회, 1999)에 2002년까지 30%를 설정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2년까지 달성 목표율을

일치시켜 제시한 기관은 46개 기관 중 20개 기관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 연도별 목표율이 대통령 지시 사항 및 국정 과제 추진 계획에 따른 정부의 목표율보다 크게 낮은 상태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이 40%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는 일환으로 정부 각종위원회 운영 지침이 시행되다가 2008년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았다. 지침 폐지 이후 각종위원회 여성비율은 다시 낮아져 2009년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여성부, 2009).

〈표 5〉 정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율

(명,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위원수	16,926	16,113	17,470	19,969	19,873	23,365	26,093	30,134
여성 위원수	5,093	5,095	5,617	6,476	6,688	7,715	8,070	8,048
여성위원 비율(%)	30.1	31.6	32.2	32.4	33.7	33.1	30.9	28.0
증감율(%)	2.4	1.5	0.6	0.2	1.3	-0.6	-2.2	-2.9

\* 자료출처 : 여성부 (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

\* 각주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법률, 대통령령, 광역시·도 조례에 설치 근거를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참여율임.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0년 6월 현재 위촉직 여성위원은 2,013명, 비율은 전체 평균 21.7%이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목표 40%에 비해 21.7%은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기관별로 보면, 40%를 넘는 중앙행정기관은 해양경찰청, 병무청,

공정거래위, 관세청, 여성가족부이고, 30%이상~40%미만인 기관은 조달청, 국세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이다. 이 밖에 기관은 30%이하이다.

〈표 6〉 중앙행정기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현황(2010.6월 현재)

(%)

구 분	40%이상	30%이상~40%미만	20%이상~30%이상	15%이상~20%미만	15%미만
기관명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	해양경찰청(75.0), 병무청(61.3), 공정거래위(44.4), 관세청(42.2), 여성가족부(40.0)	조달청(38.7), 국세청 (37.3), 특허청(37.3), 식품의약품안전청 (35.9), 교과부(32.6), 농진청(32.4), 중소기업 청(32.0)	산림청(29.5), 법제처(28.3), 보건복지부(26.0), 국가보훈 처(25.6), 농수산식품부 (25.4), 법무부(24.8), 국민 권익위(21.7), 문화체육관광 부(21.5), 외교통상부(20.0), 방위사업청(20.0)	지식경제부(19.4), 경찰청 (19.1), 문화재청(18.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8.9), 행정안전부(17.8), 국무총리실(16.2), 방통위 (16.2), 금융위(16.2), 통일부(16.1), 기획재정부 (15.9), 환경부(15.0)	국토해양부(12.8), 소방방재청(12.2), 통계청(11.3), 국방부(10.2), 고용노동부(9.4), 기상청(0.0)

\* 출처: 여성가족부, 2011. 내부행정자료.

\* 해양경찰청은 위촉직 전체 4명 중 3인이 여성이어서 75%의 참여율을 기록함. 당연직 11명에는 여성이 한명도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9년 전체 여성참여율이 29.5%로 30%에 미치지 못한다. 30%를 넘는 자치단체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전북,

전남이다. 특이한 점은 2009년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율이 광주, 전북을 제외하고는 2006년에 비하여 낮아졌다는 점이다.

〈표 7〉 지방자치단체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율

(명, %)

구 분	2006년 여성참여율	2009년			
		위원회수	위촉위원수	여성위원수	여성참여율
전국	36.0	1,589	20,267	5,980	29.5
서울특별시	37.2	114	2,030	610	30.1
부산광역시	37.4	105	1,615	362	22.4
대구광역시	37.5	62	585	227	38.8
인천광역시	36.3	130	1,499	357	23.8
광주광역시	33.8	70	664	244	36.8
대전광역시	35.1	100	1,348	466	34.6
울산광역시	38.2	66	566	226	39.9
경기도	31.5	98	1,587	566	35.7
강원도	35.4	111	1,538	419	27.2
충청북도	33.4	92	1,233	319	25.9
충청남도	36.0	75	1,009	283	28.1
전라북도	39.0	79	920	373	40.5
전라남도	36.3	91	912	282	30.9
경상북도	37.8	88	1,110	272	24.5
경상남도	38.1	168	2,176	543	25.0
제주특별자치도	35.6	140	1,475	431	29.1

\*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09. 8월 자료임.

### III. 정부내 여성참여를 위한 노력과 진전

#### 1. 여성공무원 채용 증진 정책

##### 정책 추진 연혁

-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 － 공무원 채용시험에 여성채용목표제 도입(지방 '96.3.23/국가 '95.12.22)
  - － 공무원 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지방 '02.12.31/ 국가 '02.12.26)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지침 수립(지방 '03.1.1/ 국가 '02.12.30)
- 균형인사 운영 지침 시행(지방 08.6.30)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2010.12.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편람.



여성채용목표제 근거 법령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 3(여성의 합격) 제1항과 제2항이다 <1995.12.22 본조 신설>. 그리고 구체적인 행정지침은 총무처(1995.12.22)와 행정자치부 예규(1999.4.41)에 의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지침' 이다.

제도의 기초단계에서 적용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시험은 5급 행정직·외무직, 7급 행정직·공안직 및 외무행정직 공채와 자치단체별 5급·7급

공채를 대상으로 하며, 목표비율은 1996년 10%, 1997년 13%, 1998년 15%, 1999년 20%, 2000년 20%이며 2001년부터는 직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표8>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17호에서 정한 2002년까지 여성채용목표비율을 설정한 표이다. 제도 시행한 결과,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한 추가 합격인원은 <표 9>와 같다.

<표 8>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2000~2002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5급 이상	20%	20%	20%
6, 7급	20%	23%	25%
8, 9급	20%	25%	30%

<표 9> 연도별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한 합격자 현황(1996~1999년)

(명, %)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합격인원	여성 합격자	여성추가 합격자수	합격인원	여성 합격자	여성추가 합격자수	합격인원	여성 합격자	여성추가 합격자수	합격인원	여성 합격자	여성추가 합격자수
계	3,288	883	19	3,073	850	20	1,511	309	14	1,293	280	40
행정 고시	192	19 (9.9)	2	224	25 (11.2)	4	182	42 (23.1)	5	182	31 (17)	2
외무 고시	41	4(9.8)	1	45	9 (20.0)	0	30	5 (16.7)	0	20	6 (30.0)	0
지방 고시	88	1 (1.1)	0	89	6 (6.7)	2	43	2 (4.7)	0	27	4 (14.8)	0
7급 공채	500	41 (8.2)	16	512	32 (6.2)	14	160	27 (16.8)	0	492	30 (6.1)	18
9급 공채	2,467	818 (33.1)	-	2,203	778 (35.3)	-	1,096	233 (21.3)	-	1,348	272 (20.2)	20

\* 자료출처 : 각년도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해 총 91명(행정고시 13명, 외무고시 1명, 7급 57명, 9급 20명)이 합격(96~99년) 되었으며, 행정고시는 합격인원의 1.6%, 7급 3.4%가 이 제도의 수혜를 보았다<sup>1)</sup>.

2002년까지 여성채용목표제를 시행 한 후 2003년부터 새로 도입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수가 일정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남성 또는 여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일정비율 기준은 30%를 기준으로 한다. 합격 인원의 성비 구성에서 어느 한 성이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 기준에

의하여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 151명, 남성 17명이 추가합격하였다(〈표 10〉).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9년까지 7급에서 여성 24명, 남성 12명, 9급에서는 여성 331명, 남성 488명이 추가합격하였다.

이 제도의 효과는 여성 진출이 저조했던 분야에 여성 진출이 확대되는 한편, 여성합격률이 높았던 직종에서는 남성 합격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공직내 직종간 성비 불균형 해소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행정안전부, 2009).

〈표 10〉 국가직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추가합격자 현황 (2003~2010년)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급	여3	남3, 여1	여1	남1	남1	여2	-	남1, 여4
7급	여19	여9	여10	여20	여16	여8	여5	여10
9급	남9, 여8	여4	여6	남1, 여8	남2, 여5	여5	여3	여4
합계	39(남9, 여30)	17(남3, 여14)	17(여17)	30(남2, 여28)	24(남3, 여21)	15(여15)	8(여8)	19(남1, 여18)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2009. 행정안전백서. 내부자료.

〈표 11〉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추가합격자 현황

(명, %)

구 분	7급 공채					9급 공채					비고
	합격 인원			임용목표 적용합격		합격 인원			임용목표 적용합격		
	전체(명)	여성(명)	비율	남	여	전체(명)	여성(명)	비율	남	여	
2009년	172	51	29.70%	0	2	3,295	1,643	49.90%	11	15	
2008년	500	188	37.60%	5	3	8,307	4,509	54.30%	170	66	
2007년	516	190	36.80%	0	11	7,122	4,029	56.60%	49	26	
2006년	735	253	34.40%	5	4	7,775	4,071	52.40%	130	101	
2005년	528	254	48.10%	2	4	11,773	5,962	50.60%	66	52	
2004년	509	189	37.10%	－	－	11,729	5,554	47.40%	20	41	7, 9급 포함
2003년	177	69	39.00%	－	－	6,365	3,187	50.10%	42	30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2010.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편람.

1) 2000~2002년도 여성채용목표제의 수혜인원은 자료의 제약이 있음.

## 2. 여성관리자 임용 증진 정책

### 국가직 공무원 정책 내용

- 2011년 12월말까지 정부 전체의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함  
※ 적용대상 :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일반계약직 및 외무공무원(6등급이상)
- 중앙행정기관등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2011년)」에 따른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비율을 차질없이 달성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등은 2005.1.1 이후부터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여성1명 이상 임용을 유지하여야 함  
※ 특별채용, 부처간 인사교류, 내부승진 등을 적극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인원 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함  
(예시, 서열 5번까지의 후보자 중 여성공무원 1인이 있는 경우 배수 범위내 여성공무원 1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함)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2010.9.10. 균형인사지침.

### 지방공무원 정책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2007~2011년)」에 따른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함
  - 2011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6급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6.5%이상(5급이상 9.6%, 6급 18.8%)이 되도록 노력함
  - ※ 적용대상
    - 5급이상 :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연구지도직, 계약직
    - 6급 : 일반직(연구·지도직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 이상의 여성과장이나 국장, 또는 여성부단체장을 임용하도록 적극 노력함
-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녀공무원이 차별없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결정 하도록 함
-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그 인원비율 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함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2010.12.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편람.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을 관리자로 육성하고 정책결정 직위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07~11년)'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10%이상 임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관리직 비율은 2008년 현재 10.8%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장급 이상의 4급 이상 직위에서는 2008년 6.1%, 2009년 6.8%로 2011년말 목표 10%를 향하여 가고 있다.

〈표 12〉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명,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명)	12,796	13,102	15,336	16,010	15,440	16,344	18,789	19,961	20,098	21,454
여성(명)	378	459	741	872	1,046	1,203	1,576	1,873	2,016	2,317
비율	3.0%	3.5%	4.8%	5.4%	6.8%	7.4%	8.4%	9.4%	10.0%	10.8%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2009. 행정안전백서.

〈표 13〉 국가직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2011년)

(명, %)

구 분	2006년(기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목표	-	402	458	520	599	753
	-	6.2%	6.1%	6.9%	7.9%	10.0%
실적	340	454	476	544	-	-
	5.4%	6.2%	6.1%	6.8%	-	-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2009. 행정안전백서.

〈표 14〉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명,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16,367	16,493	17,056	17,261	17,496	18,313	18,959	19,076	19,579
여성	864	877	929	1,019	1,036	1,199	1,349	1,457	1,595
비율	5.3%	5.3%	5.4%	5.9%	5.9%	6.5%	7.1%	7.6%	8.1%
		+0%p	+0.1%p	+0.5%p	+0%p	+0.6%p	+0.6%p	+0.5%p	+0.5%p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2010.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편람.

\* 5급 상당 이상의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가·나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2001년 5.3%에서 2009년 현재 8.1%, 2011년말까지 9.6%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6급 이상은 16.5%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 IV. 향후 방향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여성관련 이슈는 아마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대표성 확보와 여성들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될 것이다. 대표성과 관련한 정책결정직위에서의 여성활용은 정부조직의 경쟁력과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부가 선도적 고용주 모델로서 직급에 구분없이 성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일 것이다.

공직내에서의 여성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가 추진 중에 있다. 2011년말까지의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그 이후에도 더욱 도전적인 정책 추진목표를 가지고 관리자급, 고위급 여성공무원이 양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 연방정부에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1994년 이래로 44%를 유지하고 있고 관리직위인 'GSR 13-15'에서 여성비율은 37.2%이며,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고위공무원단(SE5)에서는 2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sup>2)</sup>.

또한 정부 각종위원회에서의 여성참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기 시작하였다. 여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와 각종위원회 운영 지침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부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40%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하였고,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평가항목에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율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인재풀이 가동된다면 위원회에서의 여성참여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행정분야에서의 여성대표성이 정책결정직위에서 30% 넘기를, 그리고 아직까지 저대표성을 보이는 각종위원회,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40%가 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 여성과 남성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성평등한 국가로 자리 매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2) <표> 미국 연방정부의 관리직위 여성공무원 비율

<표> 미국 연방정부의 관리직위 여성공무원 비율

(명, %)

구 분	2003년		2005년		2008년	
	여성수	여성비율	여성수	여성비율	여성수	여성비율
GSR 1-4	35,822	68.8	32,173	68.5	31,270	68.0
GSR 5-8	235,638	65.7	226,071	64.9	207,398	62.2
GSR 9-12	255,915	46.5	258,076	46.1	233,201	47.2
GSR 13-15	114,795	33.0	124,827	34.1	121,124	37.2
고위공무원단(SE5)	3,904	25.5	4,188	26.5	158,535	29.1

참·고·문·헌

- 강성애·류은영. 2008. 여성인적자원의 활용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7권 2호.
- 김혜영. 2007. 한국여성의 정책결정직 대표성 증진에 관한 연구. (주)한국 학술정보.
- 남승하·김종현 외. 2010.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청렴도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9권 제3호.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e-나라지표.
- 여성특별위원회. 1998/1999.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998년도 시행계획.
- 여성특별위원회. 1999. 1998년도 시행실적 및 1999년도 시행계획-중앙 행정기관.
- 진중순. 2009. 여성의 공공부문 참여와 부패수준.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8(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공공부문 관리직여성 핵심역량강화 지원방안. 2009 연구보고서 15.
- 행정안전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외. 2009. 정부내 급속한 성비변화에 따른 종합적 공직관리방안.
- 행정안전부. 2010.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편람.
- 행정안전부. 2010. 균형인사지침.
- David, D., Gatti, Raymond. & Gatti, Roberta. 1999. "Are Women Really the 'Fairer' Sex? Corruption and Women in Government" policy Research Paper on Gender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 No.4.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 UNDP. 2005~2009. Human Development Report.
- World Economic Forum. 2010. Global Gender Gap Report 2010.



# 정부의 민간기업 내 여성임원진 비율의 확대를 위한 세계 각국 움직임

최 민 영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기업 임원들의 회의실은 ‘올드보이 클럽’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성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여성이 회의실로 가려면 ‘유리천장’을 뚫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문화를 바꿔 여성임원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들이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보수적인 임원실의 빗장을 열고 있다. 기업 경영에서 소수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 힘을 주고, 성차별로 여성의 기업 내 리더십이 발현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조사들에서는 이 같은 임원진 내 여성 비율의 증가가 기업의 실적과도 직결됨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의 임원 참여로 증대되는 기업의 다양성이 곧 기업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 임원의 증가 필요성은 단순히 성평등의 이슈가 아닌 기업 이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EU의 변화 – 자율조치 없을 땐 각국에 20% 할당 강제

지난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환경관련 거대 기업 ‘베올리아앙비론느망’의 주주총회에는 일무리의 불청객들이 등장했다. 가짜수염을 얼굴에 붙인 여성 권익단체 ‘라 베르브’(La Berbe : 붙어로 수염)의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연단 위에서 “지성, 행동, 냉정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회사의 전략을 여성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현명한 일이나”고 주주들에게 물었다. 역설의 질문이었다. 임원진 17명 가운데 여성이 단 1명에 불과한 베올리아 기업 이사진의 성비 불균형이 성차별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엘리트 문화가 두드러지는 프랑스 기업의 이사진은 보통 엘리트 기업인과 관료, 그랑제꼴 출신 남성들의 사교클럽에 가깝다는 악평을 들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3일, 프랑스 정부는 향후 6년 안에 대기업 임원의 최소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상장기업이나 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수익이 5000만유로 이상인 업체 약 2000곳이 대상이다. 현재 대기업 내 여성임원진 비율이 15%에 불과하고, 3년내 목표치인 ‘임원의 최소 20%’를 충족하는 기업도 7곳에 불과한데, 이번 입법에 따라 획기적인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굳이 쿼터를 정하는 이유가 뭘까. 여성으로서 프랑스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한때는 나도 여성임원 쿼터제에 반대했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변화는 거북이 걸음이었다”면서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쪽(남성들)이 버티는 상황에서 여성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해 판도를 바꿔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 프랑스 정치권의 판단인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기업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가스회사 GDF수에즈는 기업이사진의 축소를 발표했고, 프랑스 최대 기업인 토탈은 17명 임원 가운데 3명을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여성임원의 증가는 재무성과에 도움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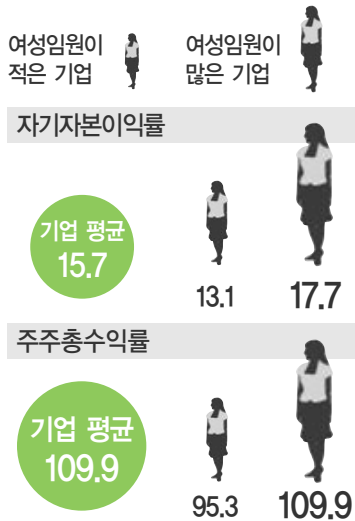
기업내 여성임원의 비율이 평균 11%에 불과한 유럽 연합(EU) 차원에서도 이 같은 ‘여성임원’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비비안 레드 EU 집행위원은 지난해 7월 “각국이 자체적으로 기업내 여성임원의 비율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리스본협약의 ‘성별 쿼터제’에 따라 ‘최소 20% 이상의 여성임원’을 법제화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린 상태다.

자율적인 대책 마련 이후 수준에 미달할 경우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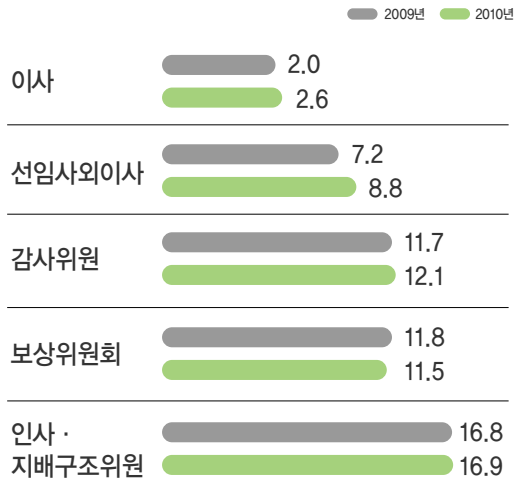
그가 최근 밝힌 목표치는 2015년까지는 현재의 3배 수준인 30%, 2020년까지는 4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유럽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의 토대가 된) 로마조약을 통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노동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업 내 의사결정 참여에 있어 여성이 성차별 받는 상황에 맞서 싸울 때”라고 레드 위원은 주장한다.

2011년 현재 유럽연합 기업의 임원진 내 여성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우에는

## 여성임원과 기업이익의 상관관계 (단위: %, 자료: 카탈리스트)



## 포천 500대 기업 경영진 내 여성의 비율 (단위: %, 자료: 카탈리스트)



100명 중 3명에 그치고 있다. 변화는 무척이나 느려서 지난 7년간 0.5% 정도씩 증가하는 수준이다. 레딩은 지난 2월 28일 뉴욕타임스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속도라면 기업 임원진 내 성비균형을 이루기까지는 앞으로 50년이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

유럽 집행위의 ‘고삐 죄기’에 앞서 이미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은 자발적 대책을 마련해왔다. 가장 앞서 나간 노르웨이는 국영기업은 2006년, 사기업은 2008년까지 이사 가운데 40%를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2003년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2년 당시 6%에 불과했던 여성임원 비율이 2010년 현재 34.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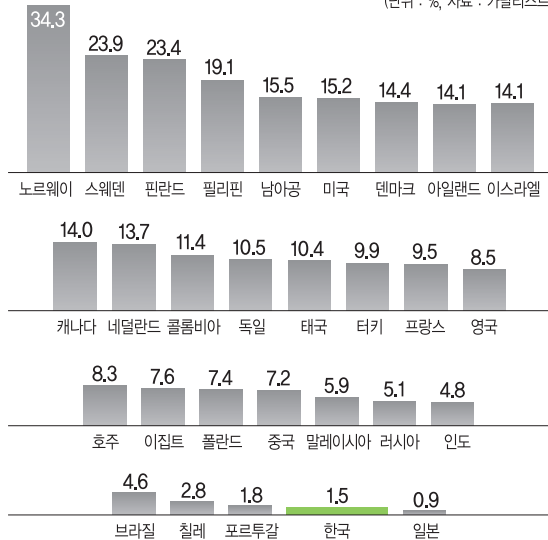
당시 이 같은 조치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노르웨이의 경제학자 마리아 라이너트센은 지난 3월 2일 영국 가디언지에 기고한 글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노르웨이는 학교 어린이의회부터 정부 내각구성에 이르기까지 이미 여성쿼터제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 내 여성임원할당제가 발표됐을 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다만 발표의 주체가 보수당 소속의 안스가르 가브리엘센 경제부 장관이라는 점이 의외였다. 그는 “노르웨이 기업 임원진 내에서 남성의 수적 우위에 질렸다”고 말했다. (중략) 일부 지지자들은 임원진 내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이 성취된 점을 기뻐했으나, 가브리엘센 장관의 주된 논점은 “기업 이사회가 전체 인구의 잠재력의 절반만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중략) 이 조치에 대해 노르웨이 최대 노동자단체와 유명한 남녀 경영진들 일부는 노르웨이의 주가가 하락하고 여성이 임원진 내에서 ‘2등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부에 동의했다.”

라이너트센은 “정계에 쿼터제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전 노르웨이 총리인 그루 할렘 브루틀란트같은 여성이 정계에 진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같은 논점이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여성쿼터제가 실시

2010년 각국 주요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  
(단위 : %, 자료 : 카탈리스트)



되자 기업들은 쿼터제가 없었더라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재능있는 여성들을 발굴해냈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은 노르웨이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기업들을 채근하고 나섰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스페인도 2007년에 ‘2015년부터 이사직 40%를 여성에게 배분’하는 쿼터제를 통과시킨 바 있다.

독일의 중도우파 연정은 최근 여성임원 쿼터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2월 “독일 2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3~4%에 불과한 것은 말 그대로 스캔들”이라며 “대기업 고위직에 더 많은 여성이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까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독일 전체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비율 평균은 2%로,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격하게 낮다.

영국은 머빈 데이비스 전 통상장관이 이끄는 정부패널이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15년까지

FTSE 350개 기업들에게 여성임원 비율을 현재의 2배 수준인 25%로 자발적으로 늘리지 않을 경우 할당제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단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유럽의 경우 대졸자의 6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이들의 시장참여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여성이 재능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 다양성 증가로 회사 혁신

유럽은 여성임원 쿼터제 등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놓은 미국 등의 국가들에서 극적인 진전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파이낸셜타임스는 헤드헌팅 업체인 스펜서 스투어트의 조사결과를 인용,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가운데 여성 임원이 한 명도없는 기업이 10개 중 1개꼴이라고 보도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인 모토로라, 의류업체 어번 아웃피터스 등에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성고용평등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카탈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전체 근로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6%임에도 전체 기업 임원의 16%만 여성이었고, 지난 5년간 비율 증가에 큰 진전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최고경영자 숫자는 늘어났는데, S&P 500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중 지난해 기준 18개로 5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 500대 기업의 조사에서도 여성 임원의 숫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 이사진 비율은 15%이고, 호주는 9%였다. 남존여비의 문화가 잔존하는 아시아에서 그 비율은 현격하게 낮아서



평균 1.8%에 그쳤다.

재계는 이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0 회사 내 성차 보고서’에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직장 내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감소시키면 생산성 및 경제성장이 증대된다는 사실이 확인돼왔다.”면서 “내부 임원진에 여성이 증가할수록 회사의 재무적 성과가 개선된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도 유로존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 내 성차별을 감소시킴으로서 유로존 내의 GDP가 최고 13%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미시적으로 볼 때 실제 기업들의 이익도 임원진 내의 여성비율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임원진 내에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과 남성으로만 구성된 기업의 이익을 비교해본 결과 전자가 56% 높은 영업이익을 냈다고 분석했다. 또 남성만으로 구성된 임원진보다 감사, 리스크 예측과 통제에 있어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 런던의 법률회사 에버셰드는 2007~2009년 전세계 241개 기업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기업의 주가가 이사회, 주주, 여성임원의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3월 7일 보도한 바 있다. 여성 임원이 많을수록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다.

카탈리스트도 2008년 보고서에서 여성임원이 많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자기자본이익률과 주주총수익률이 높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일반적인 성평등 운동 진영 내에서도 아니라 재계 내에서도 동일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 중심이 지식산업 및 지식노동자가 되는 상황에서 직장 내 다양성의 증가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여성 노동자의 재능과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여성의 임원직 진출은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 기업 내에서는 임원진 내에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득권인 ‘남성 쿼터’가 줄어들게 되므로 여성 임원후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영국의 임원급 헤드헌터 회사인 ‘인터이그제그’(InterExec)는 지난 3월 헤드헌터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9%가 영국 정부의 ‘여성임원 확대’ 방침을 충족하기 위해 더 적절한 남성을 선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10명 중 7명이 이번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능력있는 여성은 이미 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정부가 제시한 25%를 채우기에는 인재 풀이 너무 적다는 불평이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의 패널조사를 이끈 데이비스 전 통상장관은



**각국 여성임원할당 법적조치 내용** (자료: 카탈리스트)

국가명	발효시점	법 내용
유럽연합	미정	비비안 레딩 EU집행위원,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 임원진 늘리지 않으면 최소 20% 이상 두도록 법제화하겠다” (2010년 7월)
프랑스	2011년 1월	대기업에 대해 2016년까지 임원진 40% 여성할당 법 발효
아이슬란드	2010년	50명 이상 고용 기업, 2013년까지 여성의 최소 40% 고용해야
이스라엘	1993년 (국영기업)	정부지분 51% 이상인 회사에 대해 장관이 과소대표된 성별의 이사 임명 가능
	1999년 (공·사기업)	이사회 전원이 동일성별일 때 외부이사 임명 때는 다른 성별의 이사 임명해야
노르웨이	2003년	국영기업은 2006년, 사기업은 2008년까지 이사 중 40%를 여성으로 임명해야
스페인	2007년	2015년부터 이사회 10석 중 4석을 여성에게 배분해야
영국	2010년	이사회 구성 때 성별을 포함한 다양성을 고려해야
미국	2010년	쿼터제 없으나 공기업이나 뮤추얼펀드회사는 위임장 공개 때 다양성의 감안 여부를 밝혀야

“각 기업들과 리크루트 회사들은 여성 인재를 발굴해 내는 데 좀 더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성이 임원이 되더라도 일을 쉽게 그만둔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영국 인력개발연구구소(CIPD)는 2008년 ‘이사회 내의 여성’ 보고서에서 “임원직을 떠나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의 2배쯤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가족 등 개인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책임수준이 낮은 직책을 맡아 흥미를 잃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권한상 제약과 환경의 제약, 실질적 보상이 적은 직책에 보통 여성이 배정”되고 임원진 내에서 ‘2등 임원’으로 차별받는 환경이 문제라는 것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여성을 이사직에 임명한 이후 회사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실패 가능성이 큰 업무를 여성 임원에게 맡기는 직장 내 또 다른 성차별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위험요소를 여성에게 떠밀고 책임지게 한 뒤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유리 천장’ 대신 ‘유리 절벽’과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다.

임원진 내에서 여성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르네 애덤스와 대니얼 페레이라는 2009년 금융경제저널(JFE)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사진 내에 여성이 있을 경우 전반적인 이사회 출석률이 높아지는 등 활성화 경향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약한 지배구조 형태의 회사인 경우 여성이 참여하는 간간한 이사회가 유익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은 지배구조가 강한 회사일 경우 강력한 이사회는 오히려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원 선발에 있어서 공정성도 문제로 제기된다. 한 예로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여성임원 숫자를 채우려

외부에서 영입하는 과정에서 비난이 일었다. 지난해 4월 에릭 뵈르트 노동부 장관의 부인인 플로랑스 베르트가 사치품 업체인 에르메스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의 부인인 베르나데트 시라크가 사치품 업체인 모에헤네시 루이비통 그룹의 이사진에 합류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강제하는 쿼터에 맞추면서 위협적이지 않고 정치권과도 줄을 달 수 있는 여성들을 선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유럽전문직여성네트워크의 미리암 가르니에는 “여성 임원의 비율을 늘림으로써 기업 경영을 개선하라는 것이 취지임에도 이들 기업의 경우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방식의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여성 임원의 확대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소유주나 기득권층에 속한 여성들의 자리가 될 뿐 모든 여성들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노르웨이 경제학자 라이너트센 역시 “노르웨이의 여성 임원자리 중 많은 부분이 기업 소유주, 유력가 등의 차지가 된 것도 사실”이라고 가디언 칼럼에서 말했다.

## 한국 - 이제 걸음마 켜

### 여성임원 확대노력에 경주해야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의 여성임원 비율의 현주소는 어떤가.

카탈리스트의 2010년 각국 주요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1.5%를 나타냈다. 중국의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주요국 가운데 꼴찌인 일본(0.9%)보다 조금 높은 최하위 수준이다. 사법시험 등 각종 공무원임용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이 40% 선을 웃도는 상황에서 유독 기업에서만 여성인력을 푸대접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임원 배출은 여전히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경제매거진이 지난 1월 보도한 국내 30대 그룹(공기업 또는 민영화된 공기업 제외)의 여성임원 현황을 보면,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12곳으로 40%에 달했다. 오너 일가가 유일한 여성임원인 롯데와 현대그룹을 제외하면 14곳(46.7%)이다.

여성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으로 총 34명이다. 하지만 매거진은 “삼성그룹 내 임원이 1800여 명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 임원은 ‘새 발의 피’ 수준이다. 그마저도 오너 일가인 사장, 부사장을 제외하면 32명으로 비율은 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여성 임원이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은 KT로 15명으로 삼성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한국기업의 현실에 대해 린다 마이애스 전 SK 상무는 놀랍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는 조선비즈와 지난해 12월25일 인터뷰에서 “삼성·LG·현대에 물어봐야 한다. ‘당신네 여성 임원들은 어디 있느냐’고”라면서 “직원이 50명인 회사에서 여성 부사장이 1명이라면 괜찮다. 하지만 SK처럼 직원이 3만5000명인 회사에 여성 임원이 5명이라니. 도대체 여성 직원들은 어디 갔나.”고 꼬집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불확실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여성임원이 필요하다면서 “회의실에 모두 남자만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 방에서는 다른 생각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성 일색의 이사회는 한국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여성임원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문화는 아직까지 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다.

먼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간 50% 내외 선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9년 기준 5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2개국 평균치인 61.3%를 밑도는 하위권 수준이다. 미국 69.0%, 일본 62.9%에도 크게 뒤쳐진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가입국 중 꼴찌다. 한국의 대졸여성 중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비율은 2009년 기준 62.6%로 OECD 국가 평균인 82.4%보다 19.8%포인트 낮다.

이는 여성을 보육과 가사노동의 주체로 여전히 여기는 가부장적인 인식에다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동능력이 우수한 여성들이 보육의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경력에 단절되면서 임원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풀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지난해 10월 대한상공회의소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토대로 100대 국내기업 중 근로자 500명 이상인 95개 기업의 고용 현황(2009년 12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큰 폭으로 줄었다. 여성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76만3751명 중 22.9%(17만4830명)를 차지하지만 전체 관리자 비율에서는 7.1%에 그쳤고, 여성 임원은 전체 6189명 중 69명으로 1.1% 수준이다. 대부분의 경력은 임신과 출산의 부담이 큰 30대에 끝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손실이다.

우리와 남녀평등 수준이 하위권으로 비슷한 신흥 국가들까지 여성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성 임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도 더 이상 미적저릴 수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09년 남녀평등 지수에서 115위인 한국보다 불과 한 계단 위인 114위 인도에서는 요즘 기업에서 ‘여성임원 할당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 상공회의소협회(ASSOCHAM)에 따르면 인도의 여성임원 비중은 5.3%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인도 정부는 여성 이사 비율을 20%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를 통해 남녀평등의 문화가 자리 잡은 중국에서는 여성들의 육아부담이 적어 일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고, 이들 중 다수가 임원직 진출을 희망한다. 지난해 9월 뉴스위크 인터넷판에

소개된 미국 CWLP(Center for Work Life Policy)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높은 지위를 희망한다.”고 답변한 중국 여성은 75% 이상으로 미국 여성 50%를 훌쩍 뛰어 넘었다. 여성임원을 고용하는 중국 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80%에 달하며, 여성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1% 수준이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 이제는 한국의 정부도 여성 임원 확충을 위해 정부가 기업들을 채근하고 나설 차례다. 여성 임원들을 이사회에 포함시킨 세계적 기업들이 다양한 사고와 유연성으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이 때, 우리 기업들이 뛰어난 여성 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실이기 때문이다.